

민주노총,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

광주·전남 경찰청, 전 직원 출근길 운전 단속...적발 0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상체제를 갖추고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특히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히려도 거부하겠다고 노정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민언을 향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날리고, 제발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날 21일 구속됐다.

자유한국당 정당대회장에서 5·18만인 규탄 행동에 나선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집회를 시도하며 폭력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의 울산 지택은 최근 경찰의

청와대 앞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전국적 규탄 투쟁 전개해 나갈 것" "靑 대화요청 와도 조치 없인 안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대회를 시발점으로,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3일에는 공공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18일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대행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히려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행은 "(김 위원장 구속, 현대중공업 간부 압수수색 등) 이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가시적 조치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

냥 만나자, 대화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계약,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등을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이 중단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행은 경우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중단하는 등 노정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정부 주요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준 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53곳에 달한다.

김 대행은 "이번주 금요일(28일) 진행되는 일자리위원회에 저는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번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포괄까지 할 것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단병호 3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원로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12대 위원장이다.

이날 단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추방장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 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스스

음주운전 단속·차별 기준 강화를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이 24일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가량 광주·전남 지역 2개 지방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서, 2개 기동대(여경제대 포함)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펼쳤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시간대 지방청, 관내 21개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입구에서 전 직원의 출근길 숙취운전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광주·전남 양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없었다.

이번 일제단속은 오는 25일 개성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단속에는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청문감시관실 직원들이 투입됐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각 경찰관서에서 펼쳐진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봉우·김정환 기자

이런판결 저런판결

‘딸 생일날 별거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딸,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 호소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심미약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을 취급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당시 40세)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를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청하는 B씨에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심미약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상태가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항소심도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표현 못 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 동기를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줄이려 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한편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게 너무 소중한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표현 못 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 동기를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줄이려 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한편 A씨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게 너무 소중한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표현 못 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 동기를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줄이려 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서은홍 기자

학벌없는 사회 "광주 교육자치 걸돌아"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31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치조직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학운위의 경우 현장투표로 위원을 선출하는 학교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301개교(94.6%)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294개교(92.4%)는 교원위원을 무투표 당선 방식으로 선출했다.

또 2개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인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254개교(79.8%)에서 구성하지 않았다. 2개 학교에서는 3

회 이상 위원직을 연임했다가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회 총회 소집공고를 학부모화장 명의로 하지 않은 곳이 221개교(69.5%)에 달했고, 학부모총회 공지시기(7일 전)를 준수하지 않은 곳도 120개교(37.7%)나 됐다. 학부모 총회와 교 육과정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 곳은 229개교(72%)로, 학부모 총회가 학교 주도 아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에 맞춰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을 학생회 운영비로 편성한 학교는 251개교에 달했고, 나머지 67개교(21.1%)는 0.5% 미만으로 편성, 학생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인호 기자

광주공무직노조 총파업...단식돌입

광주공무직노동조합이 24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차별 철폐와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공무직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남구청사 앞에서 노조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사측인 지자체와 교섭을 벌였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 4년동안 말을 바꾸며 무책임한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직노조는 임금, 인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공무원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모성보호 복지제도의 경우 구청내 여성직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직은 다른 공무원이 하지 않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무직노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참여 조합원 79.5%가 찬성해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직노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퇴직금 가산제'는 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입장이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 자치구 공무직직원의 법정퇴직금에 퇴직금가산제가 추가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라치로, 자라치로, 영민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호남지역 129] [고대번호 1577-1000]